

공 개



의안번호	제 426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1. 24. (제 21 차)

의
결
사
항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11. 24.

1. 의결주문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업무상 횡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0조에 따른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제422조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업무집행정지,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험관리,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 해임요구
- 前 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나.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 해임요구
- 前 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다. 업무상 횡령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업무 전부정지 3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 해임요구

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대표이사 ●●● : 직무정지 3월,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마.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 직무정지 3월
- 前 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바.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대표이사 ●●●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사.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신탁계약 인계명령 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1.7.22.) 심의필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021.9.1.) 심의필
- 제19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1.10.22.) 심의필

<별지>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과태료 114.4백만원 부과

* 자본시장법 제12조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제249조의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제42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 인계명령[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43개 펀드를 리커버리자산운용(주)에 인계]

신탁계약 인계일자는 금융위 의결일의 익일로 함

- 조치사유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업무상 횡령
-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제1항 제6호,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호, 제418조(보고사항)제5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0호, 제3항제19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 및 형법 제355조(횡령), 제356조(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제1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차. 및 려.,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제1항 제1호,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3>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대표이사 ●●●● : 해임요구, 과태료 32.4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업무상 횡령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호,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 제1호, 제449조(과태료) 제2항제2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 및 「형법」 제355조(횡령), 제356조(업무상 횡령),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제1항, 제43조(과태료)제2항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 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제1항제1호,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3>

○ 사내이사 ▽▽▽ : 해임요구

- 조치사유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업무상 횡령
-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 및 「형법」 제355조(횡령), 제356조(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 「금융기관검사 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제1항제1호,

○ 前 이사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 조치사유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제2호,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제1항제2호

2. 조치사유

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옵티머스자산운용(주)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 매입,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 상환자금(돌려막기)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펀드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토록 하기 위해 투자제안서에 펀드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후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이용하여 '17.6.5.~'20.5.21. 기간 중 7개 판매 회사를 통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109개 펀드, 1조 1,824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옵티머스자산운용(주)는 '19.1.21.~11.14. 기간 중 42개 폐쇄형 펀드를 설정(4,724억원, 이하 '①펀드')하여 4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편입 하였는데 '19.8.7.~'20.6.5. 기간 중 ①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사모사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신규 펀드를 설정해 모집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기 위해 '19.7.18.~'20.6.11. 기간 중 43개 폐쇄형

펀드를 신규 설정(5,093억원, 이하 '②펀드')하여 6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5,064억원을 편입하게 하였고

동 6개 SPC는 ②펀드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이용해 ①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의 만기 상환금 3,0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②펀드는 '20.6.18.부터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편입한 사모사채를 상환받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었는 바

②펀드의 자금으로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②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①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다. 업무상 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은 (주)○○○○○○○, (주)◇◇◇◇◇ 및 (주)◆◆◆◆◆ 등 여러 SP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옵티머스 펀드자금을 각 SPC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주)○○○○○○○ 및 (주)◇◇◇◇◇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412.5억원 및 68억원을 '18.11.20.~'20.4.7.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주)◆◆◆◆◆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28억원을 '19.6.21.~ 7.24.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KOSPI200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고

옵티머스 이사 ▽▽▽와 공모하여 □□□□□(주) 및 (주)■ ■ ■ ■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주) 및 (주)■ ■ ■ ■ ■에 투자된 펀드 자금 145억 및 150억을 '20.6.12.~6.19. 기간 중 각각 출금하여 ●●●의 사채대금 변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기존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 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음

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은 '17.7.3.~'20.5.2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 : 약 15억원, 기간 중 매매일수 : 666일)하였음에도 소속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마.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자본시장법」 제419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됨에도
 -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은 '20.5.12.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요구에 대해 ☆☆☆☆(주)·★★★★(주)·※※※※※※(주)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69건을 임의로 위조하여 검사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 '20.5월말경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은폐하고자 임직원 3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舊PC와 일부 서류들을 옵티머스자산운용(주)과 동일건물(○○○○ ○○○○)에 소재한 별도 사무공간에 은닉하였으며
 - '20.6.17. 옵티머스자산운용(주) 창고에 있던 PC 및 일부 서류들을 □□□□ 소재 외부창고에 은닉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바.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 옵티머스 대표이사 ●●●은 '17.8월경~'18.1.12. 기간 중 옵티머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여 임원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사.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옵티머스는 '17.11.1. 대주주(주요주주) ●●●이 보유 지분(지분율 5.6%)을 전량 장외매도 하였음에도 대주주 소유주식의 1% 이상 변동 사실을 '20.7.10.(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할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8 (생략)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偽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9.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 형법 】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다. ~ 사. (생략)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 5. (생략)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 ④ (생략)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3.~10. (생략)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 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2017.10.19. 개정된 現 시행령)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차. 법인인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0호	10,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0호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려.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 제19호	1,80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나. (생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2021.5.18. 개정된 現 시행령)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	3,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 금융투자업 규정 】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함)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삭 제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삭 제

마. 삭 제

8. 삭 제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신설 2005. 8. 26., 2020. 5. 13.>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 삭제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거부·기피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중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
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
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
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
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
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 2> 신탁계약 인계명령 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일련번호	펀드명
1	베리타스 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2	옵티머스 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5호
3	옵티머스 SMART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4	옵티머스 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3호
5	옵티머스 가우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6	옵티머스 레포연계Prim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7	옵티머스 트러스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호
8	옵티머스 헤르메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9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6호
10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5호
11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6호
12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7호
13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8호
14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3호
15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4호
16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5호
17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6호
18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7호
19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8호
20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9호
21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0호
22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1호
23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2호
24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3호
25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4호
26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5호
27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6호
28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7호
29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8호
30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9호
31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0호
32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1호
33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2호
34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3호
35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5호
36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6호
37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7호
38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8호
39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9호
40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51호
41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52호
42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53호
43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54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630